



주간통일정세 2011-14(2011.03.28 ~ 04.0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비난…선군정치 다짐(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기자와 문답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16차 회의에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 결의가 또 채택됐다”며 “반공화국 결의 채택늘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함.
 - 그는 “적대세력들이 악의에 차서 혈똥을수록 조선 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더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부강번영의 기치인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앞서 지난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당시 표결에 앞서 서세평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대북인권결의안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음.

- **北매체들, 대북전단 ‘남남갈등’도 전해 (3/2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대내방송인 중앙방송을 통해 “26일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주민들이 전연 일대에서 반공화국 뼈라를 살포하려던 악질보수분자들의 책동을 저지했다”고 잇따라 보도
 - 이들 매체는 “극우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천안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공화국을 약탈하게 혈똥을 뼈라를 600만장이나 날려보내려 했고, 격분한 주민들은 트랙터와 화물자동차 등으로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보수분지들과 맞서 완강히 싸웠다”고 전함.
 -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의 전통문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겨냥해 ‘조준격파사격’을 경고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지역군 사령관인 전선서부지구 사령관이 나서 조준사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위협을 거듭함.

- **北 ‘중동 민주화바람 차단’ 전방위 규제조치(4/1, 연합뉴스)**
 - 북한이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저항의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 등 각종 IT기기에 대한 전방위 규제조치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연초부터 중앙당 주도하에 각 기관과 가정의 PC보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으며, USB와 MP3 등 휴대용 저장장치도 등록 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IT기기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발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범으로 처벌하는가 하면 신고과정에서 상당수 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 외국인에게도 휴대전화와 관련한 이 같은 규정을 지킬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관련, “이 소식이 내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북한은) 보도매체 결의문을 통해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외부 정보가 유통돼 주민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음.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산원에 '5의 산골과 최신의료기구' 전달(3.30,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주체사상을 변함없는 신조로 삼은 우리(北)에게는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바통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21C에도 金父子의 “反帝자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고수, 계승” 선동(3.28, 중방·노동신문)

나. 경제

● 리철 北합영투자위원장 방중(3/29,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로 부상한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인 리철 전 스위스 대사가 29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그는 제네바 유엔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와 스위스 대사를 겸임하다 작년 3월 임기를 마친 뒤 합영투자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귀국한 뒤로는 리철이라는 가명 대신 '리수영'이라는 본명을 쓰고 있으며, 합영투자위는 작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FP 국장 “北 식량가격 80% 폭등”(3/30,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의 테리 도요타 대외협력·공여(Doner Relation) 국장은 30일 북한 내 식량가격이 지난해보다 80% 가량 올라 주민들이 식량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최근 북한을 방문한 도요타 국장은 이날 ‘기아 어떻게 끝낼 것인가’란 주제의 연세대 국제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내려 예상보다 충분한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개별 국가의 원조도 크게 줄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도요타 국장은 “(북한 내) 각 커뮤니티 간에 식량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이번 조사로) 알게 됐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수유여성, 장애인, 결핵환자 등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

● 北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홍보전’(3/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면 관세면제 대상에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포함 된다”며 “외국투자기업들이 생산과 경영활동, 지대건설을 위해 들어오는 물자들, 지대 안에서 생산한 수출품,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도 속한다”도 밝힘.
- 중앙통신은 “일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특구들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라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조 관계자라는 최광남씨를 인용해 “라선의 특혜관세제도가 외국투자자들의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강조
- 중앙통신은 하루 전인 29일에는 황철남 라선 인민위 부위원장의 언급을 빌려 “라선이 동북아의 중요한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품가공지, 국제적 금융 및 관광지로 꾸려질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함.

● 北 대중교역서 6년 만에 흑자(3/31, 미국의 소리방송(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VOA는 중국 해관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2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8천818만 달러)이 수입액(7천753만 달러)을 넘어섰으며 이는 2004년 11월 북한이 중국과 교역에서 5천500만 달러의 흑자를 낸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
- 1~2월의 북중 교역액은 수입액 3억100만 달러, 수출액 2억1천700만 달러로 약 5억2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2억9천만 달러)의 1.8배로 늘었고, 특히 수출액은 작년 동기의 3배로 늘었다고 VOA는 덧붙임.
- 한편, RFA는 북중 교역에서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석탄과 철, 아연 등 광물자원이었고 최대 수입 품목은 총 수입액의 15%를 차지한 원유였다고 전하고, 1~2월 북한이 중국에서 1만5천t 분량의



곡물을 들여왔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경제)

- 北, 세계적인 알곡생산 감소·식량가격 폭등으로 “식량위기와 빈곤 문제 심각” 轉言 및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 강조(3.29, 중통·노동신문)
- 최영림 내각총리, 3.25 농업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了解하고 “관계 부문일꾼 협의회를 조직,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생산 대혁신’을 일으킬 것” 강조(3.28, 중통)
- 北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 실시(가공무역 목적의 유입물자 대상)로 “외국투자가들의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최광남(라선市 이민쫘 경제협조관계자) 선전(3.30, 중통)

다. 군사

● 北, 축구도 ‘선군’…협회장에 軍출신 리중무(4/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테오 츠반치거 독일 축구협회장 등 2011여자월드컵 조직위원회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며 “리중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고 보도
- 군 중장 출신의 신임 리 위원장은 작년 10월과 11월 2010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와 U-16 선수권대회 우승 축하연에 참석하는 등 축구 관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냄.
- 또 그는 2008년 12월 중국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복싱선수권대회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을 공항에서 마중하기도 해 그동안 군 체육단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추정됨.

● 北, ‘평양 음향영상기술 발전센터’ 설립 추진(4/3,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음향·영상 기술 발전센터’ 설립과 포털사이트인 ‘내나라 사이트’ 현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관계자에 따르면, WIPO는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오는 7~8일 평양에서 사상 처음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WIPO 소속 전문가 2명이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를 출발,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2일 평양에 도착
- WIPO 관계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전형적인 지적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인식의 변화”라며 “그동안 저작권에 무관심했던 북한이 작



년 말부터 적극성을 보이게 된 것은 상층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선군체육열성자회의’, 3.30 최룡해(黨비서), 강능수(내각 부총리), 박명철(체육상)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3.30, 중통)

2. 대외정세

● 北-美, 독일서 비핵화 등 5가지 주제 논의(3/30,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28~29일 이틀간 독일에서 미국의 전직 당국자 등과 토론회를 갖고 핵문제 등 북한 관련 5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독일 서남부 에헨겐에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스펜(ASPEN)연구소 독일 지부의 찰스 킹 말로리 국장은 “토론회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의 비핵화, 재래식 무기 감축, 남북경협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경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토론 내용과 분위기, 북미 간 이견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북한 측이 출국 전 공항에서 가질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에 만족 한다”고 말함.
- 토론회에는 북측에서 리 국장 외에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황태혁·황명심 연구원 등 6명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을 단장으로 사만사 래비지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크리스토퍼 포드 전 비확산 담당 대사 등이 참석
- 말로리 국장은 “별도 토론회는 아스펜 연구소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북한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면 앞선 토론회는 보다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한 논의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한편, 리 국장은 7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귀로에 오르기 전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눴다”면서 “쌍방은 우려들을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북한 경제대표단 방미]

○ 방미 北대표단 “경협 가능성 찾으러 왔다”(3/28, 연합뉴스)

-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 초청으로 방미중인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뉴욕에 도착해 3박4일 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시작
- 북한 경제대표단의 뉴욕 방문은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며, 이들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곳 언론사와 월가 등을 견학할 것으로 알려짐.
- 편 아시아 소사이어티 측은 이들의 뉴욕 방문이 민간 교류 차원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고, 북측 대표단 일행도 남측 언론의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제대로 응하지 않음.

○ 北경제대표단,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3/30, 연합뉴스)

- 북측 대표단 일행 12명과 초청 측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관계자 8명 등 일행 20명은 이날 코리아타운의 한 한국 음식점에서 1인당 50달러짜리 코스 정식에 한국 소주 20여병을 곁들여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방문단 일행은 나흘 동안 뉴욕에 머물면서 시티그룹과 블루밍데일 백화점, 블룸버그 통신 등을 견학했으며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교수들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짐.

○ 北경제대표단, 실리콘밸리 방문(4/2, 연합뉴스)

- 미국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방미 중인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IT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를 방문, 세계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과 산학협동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룬 곳으로 알려진 스탠퍼드 대학 등을 방문한 뒤 현지 IT업체 기업인들과 따로 대화하는 시간도 가진 것으로 전해지는 등 빠빠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 대표단 일행 12명과 초청 측인 아시아파운데이션 관계자 등 일행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글로벌IT 기업 구글을 방문해 1시간40분 간 머물렀지만 대표단 일행의 구글 내 행적은 일절 공개되지 않음.
- 오찬을 겸한 세미나를 가 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세미나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우리농축산물시설을 전 세계에 공개한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스탠퍼드대 내 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끄.



● 北태권도대표단 내달 방미…순회시범(4/2,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는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 “17명으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이르면 5월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받았고 버지니아와 텍사스 주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RFA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부터 추진됐는데 북한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2007년 방문이 성사됐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번이고 잘했다며 칭찬했고 태권도위원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미국 측에 편지를 보내도록 하기도 했다”고 소개

● 北, 日교과서 왜곡 비난…“독도는 훗날도 우리 땅”(4/3, 우리민족끼리)

-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우리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글에서 “일본 반동들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에서는 반발과 항의의 목소리가 강력히 터져나오고 있다”며 “독도는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머나먼 훗날에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라고 강조
-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규탄집회와 성명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책동은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날강도적인 침략적 본성과 외세의존에 젖어 영토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의 굴욕적 사대 매국적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함께 비난
- 또 ‘누가 부추기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일본 반동들의 독도강탈 야망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지난 세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 야망의 발로인 동시에 현 남조선 집권 당국의 친일매국행위가 불러온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

■ 기타 (대외)

- ‘무기판매 1위, 미국’ 발표(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관련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비경쟁 주범”이라며 現 한반도 정세도 “미국의 對南 무기수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3.30,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 3.28 英國 국회 상하 양원의장 및 외무성 부상 등과 담화(3.30, 중통)
- 北 군사대표단(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베트남 국방성 대표단(웬찌빙 국방성 부상) 사이 회담, 3.24 베트남 국방성 청사에서 진행(3.30, 중통)



3. 대남정세

● 北, 귀순자 송환논의 적십자접촉 제의(3/30,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 통문을 보내 귀순자 4명의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4월6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이에 “귀순자 4명은 이미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것”이라며 “귀순자 송환과 대면확인을 위한 적십자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고 대응
- 다만, 통일부는 대면확인은 불가하지만 우리 측 지역에서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고 설명
- 북측은 앞서 7일에도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포함해 포류한 31명의 전원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4명의 자유의사는 확인시켜 줄 수 있지만, 대면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대응해 적십자 실무접촉은 무산된바 있음.

● 北국방위 “南, 대화·전쟁 중 택일해야”(3/31,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과 군 부호전광들은 더 이상 두 사건(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을 등대고 무모한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맛이 나는 전쟁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입장”이라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남측 책임으로 주장하면서 남한 당국이 대화와 전쟁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대변인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기다리며 반공화국 대결놀음과 심리전에 매달리고 각종 군사연습과 훈련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 할수록 기다리는 급변사태는 북에서가 아니라 남에서 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우리와 연계시키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우리 영해 수역에 대한 선불질이 없었더라면 애당초 연평도 불바다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백두산 화산' 남북 전문가 회의]

○ '백두산 화산' 北 대표단 목록부담(3/29, 연합뉴스)

-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전 경기도 문산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은 취재진의 질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 단장인 윤영근 화산연구소 부소장과 장성렬, 주광일 등 3명의 대표단과 수행원 등 북측 일행 13명은 이날 오전 8시38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8시50분 남북출입사무소 1층 입경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검은색 계열의 양복차림의 이들은 입경장에 미리 나와 대기하던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남측 단장)를 비롯한 남측 민간 대표단 4명과 일일이 악수
-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임하는 소감이 무엇이나”는 남측 취재진의 질의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손사래를 치며 출입사무소 2층 회의장으로 향함.

○ 北대표 “日 지진으로 지하수 60cm 출렁”(3/29, 연합뉴스)

- 북측 대표단은 남측 취재진에 공개된 회의 앞부분 환담에서 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 단장인 윤영근 화산연구소 부소장은 “개성에는 눈이 왔다”며 “3월 말에 눈이 오는 것은 기상천외하고, 기상현상을 잘 모르겠다. 지진 또한 모르는 일이다. 일본 지진 후 남측 피해는 없었느냐”고 물었고, 또 “이번 일본에서 지진이 있는 다음에 우리 지하수 관측 공에서 물이 약 60cm 출렁이고 샘물에서 감탕(흙탕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많았다”며 “역시(일본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남측 피해는 별로 없었다”며 “이번 회의 주제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함.

○ 北대표단 ‘日지진.방사능 우려’로 대화유도(3/29, 연합뉴스)

- 북측 단장인 윤영근 화산연구소 부소장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해서 “우리 측(북쪽)에 미칠 것 같아서 많이, 적극적으로 감시한다”며 남측의 피해 상황을 물었으며, 남측 대표인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이름이 낮이 익는다. 선생이 쓴 논문을 내가 읽어본 것 같다”며 “논문을 많이 쓰셨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북 대표단은 이 같은 얘기를 실마리로 삼아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이번 회의가 남북 민간 전문가회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측 단장은 자신들이 당국 대표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북측 대표단을 소개하겠다고 자신을 화산연구소 부소장이자 지진국장을 겸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비해 우리 측은 당국 간 회담이 아닌 민간 전문가회의 성격을 강조했고 회의장 주변에는 민간 전문가회의 성격을 의식한 듯 회의 진행에 필요한 실무진을 제외하고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가가 (회의에) 간 것”이라며 민간협의를 강조하는 한편 “백두산 화산을 공동연구하려면 기본전제가 실태에 대한 남북 간 공유이며, 오늘은 백두산 실태에 대해 북한의 이야기를 듣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함.

○ 남북, 백두산화산 공동연구 필요성 공감(3/29, 연합뉴스)

- 남북은 29일 전문가회의를 통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북측은 4월 초에 전문가 회의를 다시 갖자고 제의했고 우리 측은 검토 후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측 수석대표인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전문가 회의가 끝난 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간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지에서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함.
- 유 교수는 “남측 대표단은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연구에 앞서 사전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교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공동연구 방식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고, “북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 이었다”며 “북측은 백두산 화산활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해 공동연구 필요성 차원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 (활동) 징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함.
- 이어 “전문가 회의라서 백두산 지질은 어떤지, 백두산 지온은 어떤지, 백두산 온천 현황은 어떤지, 북한 측의 탐사자료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측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남측 과학자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의 훌륭한 자료를 (북측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 알게 됐다”고 전함.
- 유 수석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문제 외에 천안함이나 대북 식량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함.

■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北 천안함 폭침’ 1주기 행사(토론회 · 전시회 · 참관 등)를 “反北 모략행사”라며 유사건을 “韓美의 反北정책 결과물, 특대형 사기극” 등으로 선전(3.28, 중통 · 노동신문 · 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외교부 “北우라늄 6자회담서 논의” (3/29)

-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은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지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북한 UEP 문제의 출현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관련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은 물론 비핵화 진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국이 서로 마주보면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한편 회담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장 대변인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회담과 관련해 “양국은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각 영역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은 북한 UEP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구했으나 중국은 UEP 문제는 6자회담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견해차를 보였다.

● 위성락-우다웨이, 북핵관련 입장차 확인(3/30)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30일 베이징(北京)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이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낮 12시)부터 1시간 가량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하고서, 외교부 내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의견을 나눴음.
- 이 회담은 전날인 29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간의 한·중 외교장관에 이어 북핵 관련 각론 성격의 논의



- 였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아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음.
- 회담에 앞서 우다웨이 대표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관계와 지역정세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의사소통하고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을 기반으로 6자회담에 대한 의견교환을 기대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그러나 회담에서 우리 측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데 대해 중국 측은 자칫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난색을 표시하면서 기존의 6자회담 내 논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생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전 세계에 방사능 오염물질 낙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측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 역시 안전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를 재차 전하고 한·중 차원의 공조를 제안했으나 중국 측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앞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김 장관이 양 부장에게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북핵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사전에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중국은 6자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측은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체결 논의 착수 요구를 철회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측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대화와 6자회담 병행 실시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우리 측은 북한이 작년에 저지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며 성과 없는 회담은 지양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백악관 “北, ‘UEP중지 모니터링’ 수용해야” (3/31)**
-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비핵화를 위한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토머스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카네기재단 주최로 열린 핵정책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행태(old pattern)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도널드 보좌관은 “북한은 먼저 한국과 만나 지난해의 군사적 도발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런 다음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이런 조치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지(suspension)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날 북한과 이란을 “가장 긴급한 비확산 위협”이라고 거듭 규정한 뒤 북한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복수의 수단을 갖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이는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역내는 물론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점을 중국에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합의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국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 그는 “북한은 최소한 현재까지 그런 길을 걷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서 “그 대신 도발행위를 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北 UEP ‘IAEA 통한 공동조사’ 방안 대두>(3/31)

-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대응을 놓고 한·미와 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UEP의 실체를 공동 조사하는 방안이 관련국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통해 공개한 UEP 시설을 보다 공식적 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향후 대응논의를 풀어 가는데 긴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1일 “UEP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UEP의 실체를 공동 조사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중국 정부는 UEP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이를 공동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단순히 한·미와 중국이 참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IAEA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방안에는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UEP 논의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이 같은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미지수임. 중국 측은 일단 6자회담을 조기 개최해 그 안에서 UEP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 졌음.
- 우리 정부는 최근 베이징(北京)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중국 측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측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UEP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the DPRK’s claimed)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실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지난 22일 한·중 기자단 교류행사차 방중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UEP에 대해서 미국도 공식적으로 모르고 있고, 지금 파악한 것은 한 전문가(지그프리트 헤커 박사 지칭)가 멀리서 본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음.

● “北, 작년 2월 핵관련물자 수입 시도”(4/2)

- 북한이 작년 2월 유럽의 기업을 통해 핵관련 물자인 흑연(黑鉛)의 수입을 시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뉴욕발로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플루토늄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흑연로(黑鉛爐)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입을 작년 2월 한 유럽 기업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상공단체의 명의로 유럽 기업에 “북한 무역회사의 흑연 광산 개발 및 수입에 협력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으나 이 기업은 이를 거부했음.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제안을 받은 기업이 자국 정부에 신고했고, 해당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알려졌다.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물자 조달에 관한 정보가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외교 소식통은 “이번의 북한 움직임은 병산의 일각이며 북한이 각지에 제재를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방미 北대표단 “경협 가능성 찾으러 왔다” (3/29)

-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 초청으로 방미중인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뉴욕에 도착해 3박4일 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 북한 무역성·농업성 등의 중간급 간부로 구성된 12명의 대표단 일행은 이날 아메리칸 에어라인(AA) 편으로 샌디에이고를 출발해 뉴욕 JFK 공항에 도착, 맨해튼 한복판의 한 호텔에 여장을 풀었음.
- 이들의 미국 초청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산하



-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지만, 뉴욕 방문은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있음.
- 북한 대표단 중 한 명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우리는 경제 고찰단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경제협조,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미·북 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들에 대해 미·북 양측 모두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북측 경제 관료들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음.
 -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북 대표단의 방문에 대한) 대답은 이번 방문을 요청한 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민간 차원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북, 유엔의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와중에 이들의 방문이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공부’가 목적인지, 또는 이들의 말대로 ‘미·북 간 경제협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현지의 한 소식통은 “이들의 소속이나 지위로 볼 때 특별히 북·미 간 대화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진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으로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견학하기 위한 북측 대표단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뉴욕에 머물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곳 언론사와 월가 등을 견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 소사이어티 측은 이들의 뉴욕 방문이 민간 교류 차원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고, 북측 대표단 일행도 남측 언론의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 北과학자 대표단 5월 또 방미할 듯(3/29)

- 북한의 경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과학자 대표단도 오는 5월 방미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미·북 간 학술교류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인사’의 언급을 인용해 “김책공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과학자 대표단이 5월에 미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 인사는 “지난 2월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를 방문한 북한의 과학자 대표단이 5월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협력대학인 미국의 시러큐스 대학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 과학자 대표단의 방미는 이전과 같이 정치적 사안과 관련 없는 순수한 학술 교류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과학자 대표단은 2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7개 유명대학의 과학자들과 만나 서로 간의 이해와 학술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미국의 시러큐스대는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하고 있으며 두 대학의 과학자들은 상호방문하면서 공동연구 사업을 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의 경제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은 19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미 서부지역을 둘러본 데 이어 27일 뉴욕으로 이동해 3박4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평양으로 귀환할 것임.

● 北-美 민간교류 붐물…‘봄바람’ 부나 (3/29)

- 미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재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 간 민간교류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어 주목됨. 일단 미국의 앞선 문물을 배우려는 북한의 발걸음이 분주함.
- 북한 무역성 등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대표단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에 도착해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뉴욕 등을 돌아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 북한 경제대표단은 미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 초청으로 13박14일 일정으로 방미했는데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쉘컴, 생명공학업체인 라이프테크놀로지스 등 산업현장 시찰과 세미나 등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경제를 열심히 배우고 있음. 이와 별도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주축으로 한 과학자 대표단은 지난 2월에 이어 5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방문 때 홍서현 김책공대 총장 등 과학자 대표단은 학술 세미나 등에 집중하면서도 뉴욕 맨해튼의 극장에서 3D 첨단영화인 ‘아바타’를 관람하기도 했음. 미국의 민간 쪽도 북한 못지않게 쟁걸음을 보이고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워싱턴과 뉴욕의 한반도 전문가 3명이 곧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여름으로 예정된 미 전문가들의 방북은 북미 간 민간교류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지북파’ 인사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가 28일 방북한 것도 눈길을 끄.
- 박 교수는 북한에 머물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과 면담 인사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 또 해비타트 운동에 적극적인 카터 전 대통령이 간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풀러 센터’는 4월 말 평양에



- 미국인 자원봉사자를 보내 농가 50채를 지을 계획임.
- 데이비드 스넬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4월 중 건설자재를 북한으로 운송해 4월 말 평양 순안구역 오산리로 미국인 자원봉사자를 보내 농가 50채를 짓는 공사를 시작한다”며 “우선 5월까지 농민주택 10채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음. 이처럼 북미 간 민간교류가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만 되던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옴.
- 북한 축구팀이 미국을 방문해 프로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갖는 방안은 2009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워싱턴협의회와 북한 어린이합창단과 교예단 방미공연 개최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대표단이 미국을 가거나 미국인이 북한을 가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식량지원 검토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민간급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하지만 양국 간의 활발한 민간교류가 정부 차원의 관계 또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됨.
- 한 대북 전문가는 “미 국무부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개인 차원의 일로 선을 긋고 있어 민간교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음.

● 北 리근 “北·美 대화로 해결 합의”(3/31)

- 북한 외무성의 리근 국장은 30일 미국과의 비공식 토론회에서 양측 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음.
-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 리 국장은 7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귀로에 오르기 전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눴다”면서 “쌍방은 우려들을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고 말했음. 그는 “(이번에) 미국 측과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면서 “의견교환이 비공식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음.
- 북한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독일 남부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과 비공식 토론회를 열어 양측 간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음. 이와 관련, 아스펜연구소 독일지부의 찰스 킹 말로리 4세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무기 감축, 경제협력과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5개 주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 측에서는 리근 국장,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 황태혁·황명



심을 비롯한 외무성 소속 연구원 4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도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주한 부대사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 등 6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 사만사 래비치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포드 전 비확산담당 대사, 앤서니 코즈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등이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고 안보전문가 호르스트 텔트식, 정치학자 요아힘 클라우제, 역사학자 미하엘 슈튀르머 등 독일인 3명과 스위스 전문가 1명은 토론회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말로리 소장은 덧붙였다.
- 앞서 양측은 지난 25~26일에는 베를린에서 북 외무성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현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실무 토론회를 가졌음.

● 美 “식량조사단 北파견 계획 아직 없다” (4/1)

- 미국 국무부는 31일 북한의 식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당국자들이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진행 중”이라면서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기구(WFP) 미팅에 참석했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의 만남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이 밖에 그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퇴진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은 정책”이라면서 “계속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미사일 요격훈련’ 확인(4/2)

-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이 요격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개최된 미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GMD) 실험성적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
- 그는 그동안의 GMD 실험이 알래스카주 코디악에서 발사된 모의 탄두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된 것과 거의 기하학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언급, 이들 실험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



비한 차원임을 시사했음. 그는 실험결과 나온 데이터들에 근거해 GMD체계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였음.

- 한편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국을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음. 그는 “위협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등 배치된 모든 미사일 전력의 현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DMZ(비무장지대) 인근 장사정포 강화 및 이동식 탄도미사일 증강 등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초 국방정보국(DIA)의 보고 내용을 재확인했음.

● 北 리근 “북·미 대화 성과 있었다”(4/3)

-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은 독일에서 이번 주 열린 비공식 북미 토론회와 관련해 성과가 있었다고 2일 밝혔음. 리 국장은 지난달 28~29일 독일 남부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과 비공식 토론회를 연 뒤 귀국길에 베이징 공항에 들러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음.

●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美하원 발의(4/3)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발의됐음.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온 대북강경파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제출됐음.
- 법안 제출에는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만줄로(공화, 일리노이),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유럽·유라시아위원장인 댄 버튼(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및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네바다) 등 공화, 민주당의원 8명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음.
-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및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과 및 미사일·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 국군 전쟁포로 석방,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 허용, 하마스·헤즈볼라·적군파 등과의 관계 단절 등 12개 항을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명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하려 할 경우의 조건을 강화했음.
-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음.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



당을 차지해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 해당 상임위원인 외교위원회의 존 케리 위원장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여서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함.
- 오바마 행정부 역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임.

다. 중·북 관계

● 자칭린 “中朝 고위급 왕래로 의사소통 강화”

-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이 25일 지재룡 주중 북한 특명전권대사를 접견, 북한과 고위급 인사 교류 증진을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음.
- 중국공산당 권력서열 4위인 자 주석은 지 대사에게 “중국과 북한 간 친선은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돼온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음.
- 자 주석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 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동하고 중·조 친선관계 발전을 비롯한 중요 문제들에 같은 견해를 갖게 돼 양국 간에는 큰 변화와 기쁜 일들이 많았다”며 “중·조 친선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음.
- 자 주석은 또 “올해 들어서도 중·조(中·朝) 관계는 훌륭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의 고위급 내왕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관계 확대 용의를 피력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자 주석이 방중 임박설이 나도는 북한의 후계자 김정인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 리철 北합영투자위원장 방중(3/29)

-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로 부상한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인 리철 전 스위스 대사가 29일 베이징에 도착했음. 리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계(한국시각 11시)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상무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시내로 이동했음.
- 그는 제네바 유엔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와 스위스 대사를 겸임하다 작년 3월 임기를 마친 뒤 합영투자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음. 귀국한 뒤로는 리철이라는 가명 대신 ‘리수영’이라는 본명을 쓰고 있음.
- 합영투자위는 작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 조직은 작년 말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음. 따라서 리 위원장의 이번 방북은 MOU 체결에 따른 후속 협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경제 분야의 사전 조율 차원의 행보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음.

● 류홍차이 北주재 中대사 연변 잇단 방문 (3/31)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3개월 새 2차례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방문, 라선특구 합작 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31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류 대사가 지난 25일 연변주를 방문, 덩카이(鄧凱) 서기를 만나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 듣고 연변주와 주북한 중국대사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신문은 그러나 류 대사와 덩 서기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연변주의 한 소식통은 “류 대사가 라선 특구 등을 시찰한 뒤 연변을 방문했다”며 “훈춘(琿春)에서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 운항과 라선 특구 개발 방안 등이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또 다른 소식통은 “류 대사가 지난 1월에도 연변을 방문했다”며 “주북한 대사가 3개월 새 2차례 연변을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음.
- 대북 전문가들은 류 대사의 이번 연변 방문을 북·중이 합작하기로 한 라선 특구 개발과 라진항 이용을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음. 실제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라선 특구 합작 개발과 라진항 활성화를 위한 빠른 행보를 보여 왔음.
- 북한의 외자 유치 전담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5년 내 라선특구를 합작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1월에는 처음으로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로 연변자치주에 속한 훈춘(琿春)의 석탄이 상하이로 운송됐음.
- 또 지난 16일 황철남 라선시 부위원장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지린(吉林)성을 방문, 왕루린(王儒林) 성장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리철 합영투자위원장도 지난 29일 중국 상무부를 방문했음.
- 양국 관영 매체들도 최근 대대적인 라선특구 띄우기에 나서고 있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30일 황 라선시 부위원장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라선시가 동북아의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 가공지역, 국제적 금융 및 관광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평양



발 영문기사를 보도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9일 황 부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데 이어 31일에는 라선특구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홍보전을 펼쳤음.

라. 일·북 관계

● 北, 日 교과서 왜곡 비난…“독도는 훗날도 우리 땅”(4/3)

-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문 속에 북한이 “독도는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머나먼 훗날에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라고 강조했다.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우리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글에서 “일본 반동들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에서는 반발과 항의의 목소리가 강력히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규탄집회와 성명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책동은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날강도적인 침략적 본성과 외세의존에 쫓겨 영토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의 굴욕적 사대 매국적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함께 비난했음.
- 또 ‘누가 부추기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일본 반동들의 독도강탈 야망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지난 세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 야망의 발로인 동시에 현 남조선 집권 당국의 친일매국행위가 불러온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난하는 남한 시민 단체의 일본 규탄행사 등을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캠벨 “한·미 FTA 이행법안, 곧 의회 제출”(4/1)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캠벨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부는 곧 의회에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 협정은 즉각적이고 중요한 경제적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핵심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 줄 것”이라면서 “전략적으



로는 이 협정은 아태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한·미 FTA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한·미 FTA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이어 한·미 FTA가 통과될 경우 개성공단에서 만든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것이라면서 추궁하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꿀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이 밖에 그는 “북한과 버마(미얀마)는 계속 역내 불안과 불안정의 원천들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잘못된 정책과 도발들은 역내 안정과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 그는 미국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성취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약속 및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 ‘북핵 위협’ 정치·군사대응책 본격연구(4/1)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에 본격 착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한·미가 지난달 28~29일 미국 하와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 및 제28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핵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미국에서 개최될 TTX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연습으로 초기에는 ‘정치·군사연습’(Pol-Mil)이란 대화협의체 형식으로 운용됨.
- 그러나 양국은 2~3회 TTX를 실시한 다음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임. 북핵 위협에 대응한 운용수단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양국 국방, 외교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북한 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2~3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토의하게 될 것”이라며 “TTX를 2~3차례 실시한 뒤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적용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TTX



- 가 실시되고 북핵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이 본격 연구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란도 예상된다.
-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보당국 사이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정보를 공동평가하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PI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적극적 대북억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 그는 “SPI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미 측에 설명했다며 미 측도 이해했다”면서 “특히 미측은 오는 2015년까지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국방개혁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관련해 “미 측은 사고 수습이 종료되면 (원전사고 수습에 대한) 교환을 정리해서 우리 측에 제공키로 했다”며 “특히 양국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한 정보 및 인적교류, 교리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주중韓대사관, 中외사공무원 초청포럼(3/28)

- 주중 한국대사관은 대중외교 역량강화 차원에서 30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 중국 지방정부 외사관공실 공무원들을 초청, 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초청 대상은 개발도상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간 초청, 연수시키는 ‘K2H(Korea Heart to Heart)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국 공무원 274명임.
- 대사관측은 이번 행사는 중국 외교부와 윈난성 정부의 협조로 이뤄지는 것으로, ‘한·중 관계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제이며 중국 측 참가자 10명이 사례발표와 자유토론도 곁들여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총리, 내달 12일 중국 공식 방문 (3/29)

- 김황식 국무총리가 내달 12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임. 김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나라 총리로서 역대 5번째 공식 방문임.
- 김 총리는 내달 12~14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예방,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원자바오 총리와의 한·중 총리 회담,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임. 김 총리는 이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경제·통상 등 제반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임.



- 김 총리는 이어 14~16일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열리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博鰲)포럼에 참석함.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포용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개발·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입장을 소개할 예정임. 또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각국의 전·현직 정상급 인사, 경제계 주요 인사 등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김 총리는 이밖에도 방중 기간 교민·지상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등 동포·기업인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음.

● 방중 김 외교, 원자바오·왕자루이 면담 (3/29)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예방하고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음.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과 회담에 이은 오찬을 하고서 중난하이(中南海)로 자리를 옮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찾았음.
- 이 자리에서 원 총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잘됐기를 기대 한다”며 “오는 5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양자회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넸음. 원 총리는 그러면서 “김황식 총리의 방중을 기대 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 총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음.
- 이에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면담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원 총리와 북한 문제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이어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부근 공산당 대외 연락부를 방문해 왕자루이 부장과 면담했음. 면담에 앞서 왕 부장은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왕 부장은 북 중 최고 지도자 간 교류의 채널로 중국에서 북한통으로 알려져 있음. 그동안 왕 부장은 우리 측 외교채널과는 접촉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주목됨. 김 장관은 왕 부장과의 면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물론 북한의 우리농축축 프로그램(UEP),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현안논의 불구 큰 진전 못 이뤄 (3/29)

- 한국과 중국 양국이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 북한 문제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낮 12시)께 베이징 외교부 청사를 찾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과 1시간 가량 회담하고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그러나 북한의 우리농축산물프로그램(UEP)문제와 남북대화, 북핵 6자회담, 한·중 FTA 등의 현안에 견해차가 뚜렷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음.
 - 우리 측은 특히 북한 UEP 문제와 관련,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항으로 안보리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플루토늄 핵무기 실험을 두 차례나 강행한 북한이 이제는 평화적 핵 이용을 명분으로 UEP을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그러나 중국 측은 북한 UEP 문제는 북핵 6자회담 장(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확인하고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역시 국제규범에 따른다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견해차를 보였음. 중국 측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사전 조건으로 내세워온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주장을 거두는 등 바람직한 대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가 북핵문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남북대화에서 확인하고서 북핵 6자회담으로 간다는 우리 측 입장과는 달리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의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30일로 예정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음.
 - 그러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2인자인 김정은 당 군사위 부주석의 방중 문제는 일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곤혹스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측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음.
 - 이날 회담에서는 김 장관이 북한 어민 27명의 송환과 남북한 간 백두산 화산 협의 등의 남북대화 상황을 설명했고 양 부장은 “어민 송환문제 해결이 특히 기쁘다”고 화답했음.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중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의했으나 양 부장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
 - 한·중 양측은 아울러 이미 공동연구를 마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했음.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한문제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했으며 전략적 소통을 위한 고위급 교류 강화로 상호 신뢰를 확대하자”고 합의했음.
 - 우리 측은 그 일환으로 김황식 총리의 4월중 중국 방문과 5월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요



청했으며 중국 측은 이를 긍정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아울러 내년 3, 4월로 예상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담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초청하고 그 기회에 별도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음. 또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와 왕치산 부총리의 금년 중 방한과 양제츠 외교부장의 금년 하반기 방한을 제의했음.

- 한·중 양국은 특히 금년중에 다롄(大連)과 제주에 각각 영사기구 설치를 합의하고 빠른 시기 개설에 노력하기로 했음.
-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성남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뤼자오훤이(羅照輝) 아주국장, 천쉬(陳旭) 국제국장, 천샤오춘(陳少春) 한국과장 등이 배석했음.

● 김외교 “北과 대화, 전진 전제돼야”(3/30)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북한과 대화가 열린다면 전진을 전제해야지 만나서 사진 찍고 헤어지는 회담은 유용성이 없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음.
- 김 장관은 이날 밤 베이징 중국대만점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중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음.
- 김 장관은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북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대화상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만 남한으로부터 취하려 하고 군사·핵 문제는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면 우리는 정말 북한을 돕겠다는 진정한 뜻이 있는데 북한은 모든 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듯하다”며 “진정성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6자회담 재개 시점을 언제쯤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처럼 얘기만 하다 아무 결과 없이 헤어진다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음.
- 김 장관은 “중국 또한 이런 우리의 정서는 잘 아는 것 같고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이 빨리 변하는 곳이 아닌 만큼 우리도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해 왕 부장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지도자들을 자주 찾아오게 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알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과거보다 북한 지도자급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에 비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고 김 장관은 소개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독도영유권’ 주장에 다각대응(3/30)

- 정부는 30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음.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음. 일단 정부 대책은 2008년 9월 제5차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수립된 28개 정책 사업을 토대로 시행될 예정임.
-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항의하고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독도가 국제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선 앞으로 국내 시민단체 및 일본 내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협조해 독도 영유권을 담은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임. 또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 및 고사료를 발굴하고 해외 자료에서 독도의 표기오류 조사를 강화할 예정임.

● 외교부 “역사왜곡 日교과서 즉각 시정 촉구” (3/30)

- 외교통상부는 30일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 한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또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우리의 영토”라면서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표명해온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다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日 외상, 권철현 대사 면담 이틀째 거부 (3/31)**

-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교과서 검정 문제와 관련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항의 방문을 이틀째 거부했음. 31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검정결과를 발표한 30일부터 마쓰모토 외무상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08년 7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을 당시엔 항의 방문한 권 대사를 외상 대신 사무차관과 면담토록 했으나 이번엔 아예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 일본 외상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나라인 한국 정부를 대표한 대사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임.
- 권 대사는 마쓰모토 외상을 만나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나타난 독도 도발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임.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李대통령 “천지개벽때도 독도는 우리 땅”(4/1)**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낄 뿐 심정은 국민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면서 “멀리서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직접 대응)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라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日외상 “다케시마에 대한 공격은 일본 공격”(4/1)**

-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인 만큼 독도에 대한 타국의 미사일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외무상은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 된다”고 밝혔다.
- 마쓰모토 외상은 또 독도가 공격받을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 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음.



라. 중·일 관계

● 中 “사실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헛되다” (3/31)

- 중국 정부는 31일 일본 정부의 영토 왜곡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사실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음.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센카쿠<尖閣>)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며 “중국은 다오위다오에 변하지 않는 주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다오위다오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임.

● 中관영매체 “日 교과서검정, 외교 문제될 것” (3/31)

- 중국 관영언론매체들이 31일 일본이 다오위다오(釣魚島)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기사를 쏟아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공민과의 7종류 교과서에 모두 중국과 대만이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다오위다오가 센카쿠(尖閣), 한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독도가 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각각 일본 영토로 명기됐다면, 이는 한·중 양국의 항의를 초래하고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 관영 신화통신도 도쿄(東京)발 기사로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표현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그로 인해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통신은 이어 중국도 여러 차례 다오위다오가 예전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따라서 중국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에 반론할 여지가 없는 주권이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소개했음. 아울러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이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이번에 일본 문부성이 승인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한·중 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 학기부터 사용될 것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교과서에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 여타 중국의 다른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들도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음.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도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中·日, 동중국해 마찰 재발 조짐 (4/1)

- 중국이 동중국해상에서 자국 헬리콥터가 일본 호위함에 근접 비행했



- 다는 일본 측 항의에 ‘뒤늦게’ 맞불을 지피고 나섰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26일 자국 헬리콥터가 동중국해에서 순찰활동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으며 일본의 재난 구조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장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5분(현지시간)께 동중국해에서 자위대 소속의 호위함인 ‘이소유키호(磯雪號)’에 중국의 오성홍기가 그려진 헬리콥터가 90m까지 접근해 한 바퀴 선회하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에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장 대변인은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당시 중국 헬리콥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을 통한 중국 정부의 이런 ‘지각’ 대응은 중·일 양국 간의 영토분쟁 대상인 동중국해의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 명 센카쿠 <尖閣>)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일본 영토로 명기하고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중국 외교부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며 “중국은 다오위다오에 변하지 않는 주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중국 국방부는 31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또 각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안보 관심사를 상호존중 하겠다”며 대만문제, 티베트 문제, 다오위다오 문제 등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마. 중·미 관계

● 천빙더 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5월 방미(3/31)

- 중국 인민해방군의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이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방부 경연성(耿雁生)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경 대변인은 이날 자국의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 양국군이 관계발전의 새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천 참모장의 방미로 양국 군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 총참모장의 방미는 지난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이어 이뤄지는 것임. 게이츠 장관은 애초 작년 초 아시아 순방 기회에 방중하고 천 총참모장이 방미하려 했으나 그 즈음에 미국의 대만에의 무기 수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무산됐음. 그 이후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과 남중국해 분쟁, 이란 핵문제 등으로 미중 양국이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군 교류가 사실상 표류했음.
-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



관 회의'에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게이츠 장관을 만났고,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로 미·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양국 군 교류도 정상화되고 있음.

- 경 대변인은 올해 중·미 양국 국방부 간에 잦은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